



美 구금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한국인 석방 "전세기 탑승위해 공항으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새벽 구금 시설을 떠나 나와 귀국

여정을 시작했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

은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2시 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18분)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대한항공

이민당국 체포·구금 7일만...수갑 등 구속없이 평상복 차림

약 5시간 버스로 이동 후 공항 도착...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 도착 예정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 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구금 시설 철문을 나선 한국인들은 수갑 등 구속없이 평상복으로 문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 전원이 귀국하는 것이다.

잔류한 한국인 1명은 영주권 신청자로,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한국 시간 12일 오전 1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 지난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같은 날 오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지난 9일 밤 미 정부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돼 이들의 조속한 귀국을 기다리는 이들을 안타게 했다.

미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준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란규명과 어떻게 맞바꾸냐"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협치와 야합은 달라...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아"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檢개혁 감정적 대응 비판..."언중법 건드리지 말아야"

美 구금 사태엔 "기업들美 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제도 협상 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그널드"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개를 흠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흠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러는데, 그게 무

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

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특히 검토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

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야당도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지시할) 해 놔다.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엄정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방안을) 제가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악덕 기업인과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재봉 기자

베이밸리

Bay Valley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린다!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